

시론



김영호

- 현)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국제정치)
-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대통령 통일비서관
- 일본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
- 외교부 정책 자문위원
-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남한 내 ‘쓸모있는 바보들’, 북한 실체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소련공산당 지도자들은 소련의 선전선동과 전복전에 호응하는 서구유럽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을 ‘쓸모있는 바보들’(useful idiot)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소련의 선전을 자신의 사회에 전파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련에게 ‘쓸모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국가가 공산화되었을 때 자신들은 숙청대상 제1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점에서 ‘바보들’이었다.

과거 서구에서 나타났던 이런 바보들이 남한 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들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고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전복전에 동조해서 한국이 적화되었을 때 그런 한국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은 북한에 의해 숙청대상 제1호가 될 것이다. 이런 사실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그들은 분명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쓸모있는 바보들’임이 분명하다.

한국정치는 3차원으로 봐야 한다.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덧붙여 북한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전복전’이라는 지하정치 차원을 염두에 주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전복

전에 남한의 '쓸모있는 바보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한국 내 국론이 분열되고 남남갈등이 일어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협력을 가로막는다고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것은 민족공조론의 입장에서 서서 국제공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워킹그룹은 북한에 대해 유엔과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한국의 제재 위반을 걸러내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북한은 이 기구 설립 때부터 줄기차게 그 해체를 요구해오고 있다. 이 기구가 해체되어 문재인정부가 아무런 제약없이 북한과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북한에 금전적 지원을 할 경우 한국의 기업과 은행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다. 워킹그룹 해체는 성을 들고 불에 뛰어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그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쓸모있는 바보들'이나 할 일임이 분명하다.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들이 북한에 보내는 뼈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국회는 뼈라 살포금지법을 만드느라 부산하다. 이 정도면 국회가 대한민국 국회인지 북한 최고인민회의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들여보낼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위험천만 뼈라 살포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쓸모있는 바보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

라도 그들은 한국이 북한에 의해 적화되고 나면 숙청대상 제1호가 될 뿐이다.

여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는 종전결의안을 낸다고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종전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은 이제 종전되었으니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전략자산 들여오지 말고 핵우산 거두라고 주장할 것이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남한 내 '쓸모있는 바보들'의 대행진과 대합창의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그 밑에 반미가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반미정서와 정책은 남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민족공조가 국제공조에 앞서게 되는 것이다. 북한은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면서 김정은 1인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런 폐쇄성을 정당화시키고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내세우는 선전이 민족공조론이다.

민족이라는 안경을 쓰고 남북관계를 보면 정치체제의 차이점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이고 북한은 전체주의독재체이다. 이런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족적 민족주의적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사회는 북한의 민족공조론이라는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고 만다. 신화적 민족보다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재탄생한 '국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이때

국민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들을 의미한다.

민족을 앞세우면 체제 차이뿐만 아니라 친구와 적이 누구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남한과 함께 같은 종족적 민족이라는 입장에 서면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를 위해 전복전을 펼치는 적이라는 인식이 사라지고 만다. 문재인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생명공동체’라고 말하고 있고, 중국과는 ‘운명공동체’라고 한다. 남북이 생명공동체라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민족공조론의 선전과 선동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생각 위에서 유화적 대북정책이 정당화되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생각없는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행동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어도 생각없는 행동은 없다. 남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쓸모있는 바보들’의 발언과 행동이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생명공동체를 내세우는 문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들 생각의 저변에는 시대착오적이고 비현실적인 종족적 민족주의적 사고가 깊이 배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의 폭파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햇볕정책 ‘문샤인 정책’은 과국을 맞았다. 북한과 일련의 합의를 통한 문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만적 평화쇼에 불과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김

정은 수석대변인’으로서 국제심부름이나 하고 다닌 그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되었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닌 것도 문제였다.

최근 출간된 존 볼턴의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책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할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장면이 나온다. 일본은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말하는 ‘행동 대 행동원칙’을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장면도 그 책에 자세히 나온다. 당사자인 한국이 마치 중재자를 자처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핵 폐기 의사가 없는 북한이 핵 폐기할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미북 핵협상은 하노이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북핵 완전 폐기라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김정은의 대미외교는 완전히 실패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청사폭파가 국민에게 던져준 충격은 너무나 컸다. 국민세금 170억원이 투입된 국가 재산이 북한에 의해 훼손되었는데도 문정부는 북한 눈치 살피면서 비난 한마디 못하고 있다. 북한에 재산손실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려는 문정권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가 없는 무정부상태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자국군인과 국민을 해친 이란과 테러지도자들을 수십년간 추적

해서 제거하고 있다. 모사드는 도발에는 상응하는 보복을 하고 있다. 이런 단호한 자세만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었다. 모사드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고 청사 폭파의 경우 보상금도 요구는 해야 할 것 아닌가. 북한이 도발하니까 오히려 더욱 대북 유화론자들로 대북 라인을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으로 미국과 일본은 한국과 정보 교류조차 하지 않을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대북한 유화정책은 북한의 더 큰 도발을 불러올 뿐이다. 김여정을 내세워 도발수위를 높여가던 김정은이 6월 23일 갑자기 당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도발 보류를 발표했다. 그것은 핵 탑재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고 핵공중통제기를 띄워 북한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경고 때문이었다. 북한은 태엽감은 장난감 자동차와 같이 강력한 억지력의 벽에 막히면 멈추어서고 허점을 보이면 더 큰 도발로 대응한다. 과거 히틀러의 초기 도발을 용인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역사적 경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도발로 나온다. 이 점을 잊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공조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도발을 유엔과 미국의 제재 탓으로 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마저 여론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모든 문제를 '대북한 적대시정책' 탓으로 돌리는 북한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

책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적대시정책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국제정치를 빼놓고 우리민족끼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종족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족공조론은 안보의식을 무장해제하고 한미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국 내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휘둘리고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화 현상'은 '전체주의적 사고'의 일상화를 통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민주적 전체주의'로 타락시키고 있다. 여기서 민주적 전체주의는 국민주권론에 의해 선거는 실시되지만 선거 이후 등장한 권력이 자유민주주의를 독재화하고 타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반대 말은 '민주적 자유주의'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문대통령은 6.25가 북한 남침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은 입 밖에도 꺼집어내지 않고 민족공조론과 '남북 생명공동체론'을 내세워 북한에 퍼줄 궁리만 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핵을 가진 북한의 도발에 무감각해지고 전북전에 속아넘어가는 사회 분위기는 6.25전쟁 이후 최고 안보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신냉전이 전개되면서 문정부의 대북한 유화정책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대리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 모두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